

재일 한국인의 의식에 관한 연구

정찬원*

1. 연구목적

일본 거주 한국인 즉 재일 한국인들의 생활실태와 의식을 파악하고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이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것은 사실측정에 주안점을 두고 하나의 탐색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본 연구를 행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설의 설정 없이 직접문제의 해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연구 문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재일 한국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이 일상생활 면에서 취하는 태도와 일본사회에서 체험했던 일들을 조사 하며, 둘째, 이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현행 일본의 외국인 행정에 관한 의견 과 요망사항 그리고 재일 한국인 사회의 미래에 관한 전망 등을 보며, 마지막으로 재외동포 정책 관련, 이들이 한국정부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 지로 정하였다.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재일 코리언 재한 일본인 연구실장

3. 연구 방법

위에서 말 한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설문지 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 방법을 사용 하였는바, 이를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자료 수집

표본의 수는 500명 정도로 계획 하여, 미 회수분, 미완성 조사표를 감안, 재일 한국인 1,00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본 추출은 민단체 조직 구성원(4개 단체)과 재일 한국인연합회 회원(뉴 커머회) 그리고 일반 민간인인 재일 한국인 등 6개 그룹으로 하였다.

민단체 조직 간부의 경우는 조사 대상자의 연령을 고려, 연령층이 높은 민단 간부와 재일 한국 상공 회의소 간부, 이들에 비해 연령층이 낮은 재일본 대한민국 청년회 전국간부(18세~30세)와 재일 한국 청년 상공회 간부(25세~45세)등 4개 그룹으로 선별한 유층적 표집(stratified sampling)을 사용 하였다.

설문지는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전국간부 250명, 재일 한국 상공 회의소 전국간부 124명, 재일본 대한민국 청년회 전국간부 50명, 재일 한국 청년 상공회 전국간부 76명 등 민단체 조직 간부 500명과 재일 한국인연합회 회원 200명, 일본 120개 시 군 거주 일반 민간인인 재일 한국인 300명 등 1,000명에게 배포 하였다.

자료 배포 및 회수는 민단 전국간부는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중앙 본부가 재일본 대한민국 청년회 전국간부는 재일본 대한민국 청년회 중앙본부, 재일 한국 상공 회의소 전국간부 및 재일 한국 청년 상공회 전국간부는 재일 한국 상공 회의소 연합회, 재일 한국인연합회 회원은 동 연합회의 사무국이 하였으며, 일반 민간인인 재일 한국인은 우편을 이용 했다.

회수 결과를 보면 민단 전국간부 197명, 재일 한국 상공회의소 전국간부 72명, 재일 한국 청년 상공회 전국간부 76명, 청년회 전국간부 46명, 재일 한국인 연합회 회원 42명, 일반 민간인인 재일 한국인 69명으로 전체 502명으로부터

응답이 있었다.

설문지 배포는 재일본 한국인연합회는 2009년 6월 22일, 민단, 청년회, 청년상공회는 2009년 6월 25일, 일반 민간인인 재일 한국인은 2009년 6월27일에 우송 하였으며, 회수일은 재일 한국 상공 회의소와 청년 상공회, 청년회는 2009년 7월 22일, 일반 민간인인 재일 한국인은 2009년 8월 10일, 재일 한국인연합회는 2009년 8월 20일, 민단은 2009년 10월 9일에 회수되었다.

나. 자료 분석

회수된 조사 자료는 사회조사 분석 전문기관인 (주)리스 피아르 조사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 조사 응답자 6개 그룹별로 문항별로 빈도수 및 백분율을 계산, 이를 집계 한 후, 최종적으로 재일 한국인 수치를 동 조사 연구소에서는 작성하였다.

이번 조사 응답자들의 기본 속성을 보면

(1) 응답자의 구성은 남성 348명 (69.3%), 여성 150명 (29.9%), 세대별은 2세가 220명 (43.8%), 3세 157명 (31.3%), 1세 55명 (11%), 재일 한국인연합회 회원 42명 (8.4%), 4세 16명 (3.2%) 순이다.

(2) 조사 응답자의 출생국은 일본이 380명 (75.7%), 한국이 117명 (23.3%)이다.

(3)도일 시기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1980년 까지가 59명 (11.8%), 1980년 이후 31명 (6.2%), 해방전-1945년 8월 15일 이전 22명 (4.4%)이다.

(4)연령은 40~44세가 61명 (12.2%), 50~54세 56명 (11.2%), 25~29세 55명 (11%), 70세 이상 51명 (10.2%), 65~69세 48명 (9.6%), 35~39세 47명 (9.4%), 55~59세와 60~64세가 각각 46명 (9.2%)이다.

(5)학력은 대졸이 211명 (42%), 고등학교 졸 157명 (31.3%), 전문대학 및 단대졸 62명 (12.4%), 중학교 졸 28명 (5.6%), 대학원 졸 23명 (4.6%)이다

(6)직업은 자영업 190명 (37.8%), 회사원 168명 (33.5%), 관련단체 직원 55명 (11%), 전업주부 26명 (5.2%)이다.

(7)연간 수입은 300만엔 이하가 66명 (13.1%), 301만엔~500만엔 이하가 64

명(12.7%), 501만엔~1,000만엔 이하가 58명 (11.6%), 1001만엔~1,500만엔 이하 17명 (3.4%), 1501만엔 이상 40명 (8%), 무응답자 257명이다.

(8)결혼관계는 기혼자 388명 (61.8%), 미혼자 106명 (21.1%), 기혼자중 동족 간결혼 310명 (79.9%), 일본인과의 결혼 73명 (18.8%)이다.

(9)한국에 친척이 있다가 449명 (89.4%), 이들 중 319명 (71%)이 친척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10)한국어 구사능력에 관해서는 간단한 회화만 가능이 141명 (28.1%), 대체로 말한다 89명 (17.7%), 잘 말한다 132명 (26.3%)으로 회화가 가능한자가 전체의 72.1%를 차지하였다.

(11)한국어 수확정도는 전혀 수확하지 않음이 261명 (52%),수확경험이 있다가 232명(46.2%), 수확기간을 보면 12년 이상이 87명 (17.3%), 1년 미만이 46명 (9.2%), 3년 미만이 44명 (8.8%), 6년 이상 12년 미만이 23명 (4.6%), 3년 이상 6년 미만 26명(5.2%)이다.

(12)한국방문 유경험자가 487명 (97%), 이 중 15회 이상 한국을 방문한 사람이 254명 (52.5%)에 달하였고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은 14명 (2.8%)이었다.

4. 설문 내용

설문지는 연구 목적에 해당되는 30개 항목과 조사 응답자의 속성을 묻는 16개 사항을 포함, 전체 46개 질문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질문사항별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본 거주 경위 (2)갖고 있는 이름 (3)주로 사용하는 이름 (4)통명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 (5)본명을 사용해도 사회 활동상 지장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6)한국 방문 시 사용 하는 이름 (7)외국국적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의 유무 (8)채용 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의 유무 (9)국적문제로 마음을 상한 일의 유무 (10)일본에 대한 친밀감 유무 (12)

일본에 귀화 의사의 유무 (13)귀화 의사가 있는 경우 그 이유 (14)자녀 귀화에 대한 의견 (15)일본에 귀화한 동포에 대한 의견 (16)향후 외국인에게 문호가 개방 될 때 귀화자 수의 전망 (17)일본사회를 위한 공헌 여부 (18)20년 후의 재일 한국인 사회의 전망 (19)민단 추진사업 참여 여부 (20)대한민국에 대한 친근감 유무 (21)한국정부가 재일 동포들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 (22)재외동포 대상 한국어나 한국문화 교육 필요성의 유무 (23)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 (24)한국어 교육 관련 한국정부가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25)재외동포 네트워크 추진사업이 재외동포 사회발전에 기여 하겠는가? (26)재외동포 네트워크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27)한국의 이미지 재고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28)현재 일본사회의 재일 한국인에 대한 처우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29)불충분 하다고 생각하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는가? (30)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재일동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31)조사대상자의 성별 (32)조사대상자의 세대 (33)조사대상자의 출생국 (34)조사대상자의 도일 시기 (35)조사대상자의 연령 (36)조사대상자의 학력 (37)조사대상자의 직업 (38)조사대상자의 연 수입 (39)조사대상자의 결혼관계 (40)조사대상자의 한국친척 관계 (41)친척과의 연락여부 (42)한국어 구사능력 정도 (43)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 (44)한국어 교육을 받은 기간 (45)한국 방문 유무 (46)한국 방문 횟수

5. 연구 결과

가. 재일 한국인의 생활 실태면

(1) 일상 생활 및 태도

(가) 갖고 있는 이름

본명 (한국식 이름)만 갖고 있는 경우 25.4%, 본명과 통명 (일본식 이름)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 74.6%로 나타남.

1세의 경우 본명만 갖고 있는 경우가 48.1%, 본명과 통명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51.9%로 나타났으나, 2세와 3세는 본명과 통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제일 한국인연합회 회원의 경우 본명만 갖고 있다는 응답이 75%로 나타남.

(나) 주로 사용하는 이름

통명을 주로 사용하고 필요시 본명을 사용한다가 59.7%로 가장 많았으며, 본명을 주로 사용하고 필요시 통명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24.5%, 본명만 사용한다가 8.7%, 통명만 사용이 7.1% 순임.

제일 한국인연합회 회원의 경우 본명을 주로 사용하고 필요시 통명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72.7%임.

(다) 통명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과 교제할 경우 본명보다 통명이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41.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한다는 것이 38.2%, 본명을 사용할 경우 사회생활 상 외국인으로 밝혀져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인가 10.8%로 나타났다.

(라) 본명을 사용해도 사회활동 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본명만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68.7%였고 그래도 통명을 사용하겠다는 31.3% 였다.

(마) 일본사회를 위한 공헌 여부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회봉사활동 실시 등 일본사회를 위해 보통으로 참가하고 있다가 69.7%,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가 17.2%, 참가하고 있지 않다가 13.1%로 나타났다.

(2) 일본사회에서 체험 했던 일

(가)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험 유무

지금까지 일본에서 회사,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 취직을 희망하였을 경우,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다가 19.5%, 없다가 80.5%이었다. 1세에 비해 2세 이상은 원서접수 또는 채용을 거부당한 경험이 다소 높았다.

(나) 채용 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치 부서 및 승진 시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가 6.3%, 없다가 93.7% 이었다.

(다) 국적문제로 마음이 상한 경험이 있다가 55.6%, 없다가 44.4% 이었으며, 마음이 상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놀림, 멸시가 56.6%, 경제적 법적 사회적 차별이 33.5% 등 이었다.

나. 재일 한국인 의식면

(1) 일본의 외국인 행정에 관한 의견

(가) 영주 외국인 참정권 부여 문제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지방의회,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41.4%, 선거권을 부여한 후 피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28.5%, 선거권만 부여하여야 한다는 16.4%로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86.3%나 되었다.

(나) 일본 귀화 의사 유무

일본에 귀화할 의사가 있다가 21.7%, 없다가 78.3%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0년 민단 중앙 본부 조사 결과인 귀화 의사가 없다 43.6%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귀화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한국인이므로 42.6%,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이 36.4% 이었다. 귀화 의사가 있는 경우는 일본에서 영주할 생각이기 때문에, 외국국적으로는 사회활동 상 제한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 자녀 귀화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맡기겠다고 72.7%, 찬성 14.5%, 반대 12.8% 이었다.

(라) 일본에 귀화한 동포에 대해서는 어느 쪽 이라고 말할 수 없다가 70%, 좋다고 생각한다고 16%,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7.2%, 매우 좋다는 생각이 6.2%,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0.6% 이기 때문에 어느 쪽 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귀화한 동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편이 많았다.

(마) 일본에 대한 친밀감 유무

어느 정도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가 44.1%, 매우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 39.1%, 어느 쪽 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12.8%, 그다지 친밀감을 가지고 있지 않

다 3.4%, 전혀 친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0.6% 순으로 나타나, 일본에 대해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3.2% 이었다.

(바) 현재 일본사회의 재일 한국인에 대한 처우에 대한 평가

어느 쪽 이라고 말할 수 없다가 32%,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가 31.2%, 그런 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9.9%, 매우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2.5%,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1%로, 불충분하다가 43.7%것에 반해 충분하다는 22% 이었다.

(사) 개선해야 할 사항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한 내용은 참정권 40.7%, 취업 19.3%, 의식개선 14.7%, 법적지위 14%, 사회적 지위 12.7%, 복지 10.7%, 교육 7.3%, 역사교육 6.7%, 행정 3.3%, 인권 2.7% 순 이었다.

(아) 한국에 대한 친근감

매우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 49.9%, 어느 정도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 39.2%,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 7.6%, 별로 친근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2.6%, 전혀 친근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0.6%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일 한국인 1세의 경우 한국에 대해 매우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가 68.5% 이며, 2세, 3세로 갈수록 매우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20년 후의 재일 한국인 사회에 대한 전망

지금부터 20년 후에는 재일 한국인 사회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체가 거의 없어 질것이다가 42.1%, 지금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26%, 잘 모르겠다 21.7%, 지금보다 결속 된 사회가 될 것이다 10.2% 순이었다.

다. 재외동포 정책수립에 관한 의견

(1) 한국정부가 재일동포들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

정부가 일본거주 재외동포를 위해 시급히 지원해야 할 분야는 한국문화, 한국어 교육, 한민족 문화 행사 등 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제시한 사람

이 66.7%, 한국정부 지원 재일동포 대상 투자지원 센터 설립 7.8%, 거주국 정착에 도움이 될 네트워크 정보제공 6.7%, 거주국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등에 대한 재외국민 보호 활동 4.5%, 무료 의료봉사 활동 1.9% 거주국 정부와 재외동포 관련 협력 강화1.7%, 직업훈련 사업의 확대 1.5%, 한국기업의 합작투자 진출 장려 1.1%, 방문 취업제 확대 0.9% 순이었다.

(2)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나 한국문화 교육 필요성 유무

필요한 편이다가 40.7%, 매우 필요 하다 45.5%, 보통이다 11.9%, 필요 없는 편이다 1.2%, 전혀 필요 없다 0.6% 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86.2% 였다.

(3)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

같은 민족 또는 자신의 근본을 알아야 하기 때문인가 78.2%, 향후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알아야 사회생활에 유리하기 때문에 15%, 기타 6.8% 순이었다.

(4) 현지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 하여 한국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은?

재정지원 51.5%,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19.8%, 한국어 교사에 대한 지원 19.6%, 어학 실습장비 지원 3.2%, 교재지원 2.8% 이었다.

(5) 재외동포 네트워크 추진사업의 재외동포 사회 발전기여 여부

어느 정도 발전이 기대된다 52%, 매우 발전이 기대된다 19%, 보통이다 18.2%, 별로 발전할 것 같지 않다 0.4%으로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6) 재외동포 네트워크화를 위한 정책

전 세계 재외동포의 네트워크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류형태 다각화 19.7%, 재정지원 및 의식개선 각 6.3%, 단체지원 및 교육강화 각 4.7%, 홍보 3.9%, 문화교류 3.1% 순으로 특히 교류형태를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별, 연령별, 국가별로 여러 방식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7)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

개인적으로 주변 현지인에게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가 33.3%, 자기가 속한 단체나 기관에서 때때로 현지인들에게 한국소식 등을 알려 자체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32.4%, 한국에 대한 홍보활동을 할 의향이 있으나 자료나 정보, 예산 등이 부족하여 하고 있지 않다 15%, 한국에 대한 홍보보다는 일본에 대해 더 관심이 많다 8.1%, 기타 11.2% 이었다.

(8) 한국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활동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일본지역의 재외동포들이 할 수 있는 일로서는 정체성 확립 12%, 홍보 11.4%, 문화전파 10.8%, 질서준수 8.9%, 정부 역할 촉구 및 자기개발 각 5.7%,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 5.1%, 민단강화 및 민간교류 각 4.4%, 한국 제품 구매 및 역사이해 각 3.2%, 한국어 사용 및 교육 2.5%, 의식개선 1.9% 순이었다.

6. 요약 및 결론

가. 재일 한국인의 정체성 인식

(1) 이름(본명과 통명) 관련

4명 중 3명이 본명(한국이름)과 통명(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1명만이 본명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통명을 주로 사용하고 필요시 본명을 사용한다는 사람이 10명 중 6명 이었다 이와 같이 통명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로는 일본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과 교제 할 경우 본명보다 통명이 친근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1.4% 이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한다가 38.2%였다. 그러나 본명을 사용하더라도 사회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본명만을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68.7%에 달하였다.

(2) 불평등 인식 및 경험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취업 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가 19.5%였으며, 2세, 3세, 4세로 내려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취직 후 근무부서 배치 및 승진 등에 있어서 불평등 경험은 6.3% 정도이며 젊은 세대일수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국적 및 귀화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인 55.6%가 국적문제로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고 응답 하였다.

일본으로의 귀화의사는 대부분(78.3%)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를 세대별로 보면, 재일 한국인 1세의 경우 12.7%만이 귀화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2세(19.2%), 3세(29.3%), 4세(38.5%)로 세대가 내려갈수록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나. 일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 일본에 대한 친밀감

5명 중 4명이 일본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1세보다는 2세, 3세 등 세대가 내려갈수록 친밀감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 참정권 부여

지방 참정권(선거권) 부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86.3%나 달하였다. 지역주민으로서 지역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 투표권이 이들에게 조속히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일본사회 참여정도

응답자의 87%가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위해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재일 한국인 처우에 대한 평가

현재 일본 사회의 재일 한국인에 대한 처우는 충분하다고 답한 사람이 22%였으며, 불충분하다는 사람이 43.7%로 약 2배 정도 불만족스러운 비율이 더 높았다.

다. 한국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 한국에 대한 친근감

응답자의 약 90%가 한국에 대하여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세대별로는 1세가 가장 높은 반면, 점차 세대가 젊은 층으로 갈수록 친근감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2)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필요성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교육에 대해 응답자의 86.2%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의 국가 브랜드 재고를 위한 활동

응답자들은 국가 브랜드 재고를 위해 개인적으로 주변 현지인에게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해 홍보 하고 있다가 33.3%, 자기가 속한단체나 기관에서 때때로 현지인들에게 한국 소식 등을 알려 자체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가 32.4% 등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 재외동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체성확립 12%,홍보 11.4%, 문화전파 10.8% 순이었다.

(4) 한국어 교육 관련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

한국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일로서는 재정지원,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지원, 한국어 교사에 대한 지원 등을 들었다.

(5)재외동포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전망

재외동포 사회발전을 위해 재외동포 네트워크 사업이 기대된다고 한 사람이

응답자의 71%였다.

(6) 한국정부가 재일 한국인을 위해 시급히 지원해야 할 일

한국문화, 한국어 교육, 한민족 문화행사 등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한 지원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한국정부 지원 재일동포 대상 투자지원 센터설립, 거주국 정착에 도움이 될 네트워크 정보제공 등이었다.

7. 제언

가. 금번 재일 한국인 의식조사에 있어서 특히 표본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향후 조사는 재일 한국인 전체 모집단을 대표 할 수 있는 표본추출이 필요하고 아울러 민단체 동포뿐만 아니라 조총련계 동포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나. 이번 설문조사 응답에서 재일 한국인들이 일본사회와 한국정부에 요망하고 있는 사안들이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在日韓国人の意識に関する研究

鄭燦源*

1. 研究目的

本研究は日本に居住する韓国人、すなわち在日韓国人の生活実態と意識を把握、さらに韓国政府の在外同胞政策について意見を調査し、政策に反映させていくことを目的とする。

本研究は事実の把握に主眼点をおいて、一つの探索的なアプローチ方法として研究を行なった。したがって、本研究では仮説を設定することなく、直接に問題の解答を求めたことになる。

2. 研究問題

研究問題は三つに分けられる。第一、在日韓国人の生活実態を把握するために、日常生活における彼らの態度、および日本社会で体験したことを調査する。第二に彼らの意識を知るために、現在の日本の外国人行政に関する意見と要望、および在日韓国人社会の未来に関する展望に目を向ける。最後に、在外同胞政策に関連して、韓国政府に望むものとは何かを考えてみる。

* 高麗大学 日本研究センター 在日コリアン・在韓日本人 研究室長

3. 研究方法

本研究ではアンケート調査による実証的な研究方法を用いた。以下では、これを資料収集と資料分析に分けて説明する。

3-1. 資料収集

標本数は500人程度を計画した。未回収や未完成の場合を予想し、1000人の在日韓国人を調査対象にした。標本は、民団系の組織構成員(四つの団体)、在日韓国人連合会会員(ニューカマー会)、そして一般民間人である在日韓国人など、六つのグループから取った。民団系組織幹部の場合、調査対象者の年齢を考慮し、年齢層の高い民団幹部と在日韓国商工会議所の幹部、彼らより若年の在日本大韓民国青年会の全国幹部(18~30歳)と在日韓国青年商工会の幹部(25~45歳)など、四つのグループから選別した類層的なサンプリング(stratified sampling)を用いた。

アンケートは、在日本大韓民国民団の全国幹部 250人、在日韓国商工会議所の全国幹部 124人、在日本大韓民国青年会の全国幹部 50人、在日韓国青年商工会の全国幹部 76人など、民団系の組織幹部 500人と、在日韓国人連合会会員 200人、日本120の市町村居住の一般民間人である在日韓国人 300人など、1000人に配布した。

資料配布および回収は、民団の全国幹部は在日本大韓民国民団の中央本部、在日本大韓民国青年会の全国幹部は在日本大韓民国青年会の中央本部、在日韓国商工会議所の全国幹部および在日韓国青年商工会の全国幹部は在日韓国商工会議所、在日韓国人連合会の会員は同連合会の事務局に担当していただき、一般民間人である在日韓国人は郵便を利用した。

回収結果としては、民団の全国幹部 197人、在日韓国商工会議所の全国幹部 72人、在日韓国青年商工会の全国幹部 76人、青年会の全国幹部 46人、在日韓国人連合会会員 42人、一般民間人である在日韓国人 69人から総計 502人の回答があった。

アンケートの配布は、在日韓国人連合会は2009年6月22日、民団、青年会、青年商工会は2009年6月25日、一般民間人である在日韓国人は2009年6月27日に郵送で行なわれた。回収は、在日韓国商工会議所と青年商工会、青年会は2009年7月22日、一般民間人である在日韓国人は2009年8月10日、在日韓国人連合会は2009年8月20日、民団は2009年10月9日に行なわれた。

3-2. 資料分析

回収された調査資料は社会調査分析専門機関である(株)リス・ピアル調査研究所に分析を依頼、調査回答者六つのグループ別に項目別に頻度数および百分率を計算、集計した後、最終的に在日韓国人の数値を同調査研究所で作成した。

今回の調査回答者の基本的な属性をみると、

(1) 回答者の構成は、男性348人(69.3%)、女性150人(29.9%)、世代別には二世が220人(43.8%)、三世が157人(31.3%)、一世が55人(11%)、在日韓国人連合会会員42人(8.4%)、4世16人(3.2%)の順である。

(2) 調査回答者の出生国は日本が380人(75.7%)、韓国が117人(23.3%)となっている。

(3) 渡日時期は、1945年8月15日以後1980年までが59人(11.8%)、1980年以後31人(6.2%)、戦前～1945年8月15日以前22人(4.4%)である。

(4) 年齢は40～44歳が61人(12.2%)、50～54歳56人(11.2%)、25～29歳55人(11%)、70歳以上51人(10.2%)、65～69歳48人(9.6%)、35～39歳47人(9.4%)、55～59歳と60～64歳がそれぞれ46人(9.2%)である。

(5) 学歴は、大卒が211人(42%)、高卒157人(31.3%)、短期大卒62人(12.4%)、中卒28人(5.6%)、大学院卒23人(4.6%)である。

(6) 職業は、自営業190人(37.8%)、会社員168名(33.5%)、関連団体職員55人(11%)、専業主婦26人(5.2%)である。

(7) 年間収入は、300万円以下が66人(13.1%)、301～500万円以下が64人(12.7%)、501～1,000万円以下が58人(11.6%)、1001～1,500万円以下17人(3.4%)、1501万円以上が40人(8%)、無返答257人である。

(8) 結婚は、既婚者 388人 (61.8%)、未婚者 106人 (21.1%)、既婚者の中では在日韓国人同士の結婚 310人 (79.9%)、日本人との結婚 73人 (18.8%)である。

(9) 韓国に親戚がいると答えた人が449人 (89.4%)、この中親戚と連絡をとっていると答えたのは319人 (71%)である。

(10) 韓国語能力に関しては、簡単な会話のみ可能が 141人 (28.1%)、それなりにできる 89人 (17.7%)、上手にできる 132人 (26.3%)ということで、会話可能が全体の72.1%を占めている。

(11) 韓国語の学習に関しては、全く経験なしが261人 (52%)、学習経験ありが232人(46.2%)、学習期間をみると12年以上が 87人 (17.3%)、1年未満が 46人 (9.2%)、3年未満が 44人 (8.8%)、6年以上 12年未満が 23人 (4.6%)、3年以上 6年未満 26人(5.2%)である。

(12) 韓国訪問の有経験者が 487人 (97%)、この中に15回以上訪れた人は 254人 (52.5%)に達しており、一度も韓国を訪れたことのない人は 14人 (2.8%)あった。

4. 設問内容

アンケートは研究目的に該当する30個の項目や、回答者の属性を問う16個の事項を含め、総計46の質問事項で構成されている。質問事項別の調査内容は次のようである。

(1)日本居住の経緯 (2) 持っている名前 (3) 主に使う名前 (4) 通名を主に使う理由 (5) 本名を使っても社会活動上に支障のない場合、どうするか。(6) 韓国訪問の際に使う名前 (7) 外国国籍という理由から不利益を受けた経験の有無 (8) 採用後、外国人という理由で不当な待遇をされた経験の有無 (9) 国籍問題で傷つけられたことの有無 (10) 日本に対する親密感の有無 (12) 日本への帰化意思の有無 (13) 帰化意思のある場合はその理由 (14) 子女の帰化に対する意見 (15) 日本に帰化した同胞に対する意見 (16) 今後外国人に門戸開放の際、帰化者数の展望 (17) 日本社会への貢献 (18) 20年後の在日韓国人社会の展望 (19) 民団推進事業への参加如何 (20) 大韓民国に対する親近感の有無 (21) 韓国政府が

在日同胞のために緊急にすべきこと (22) 在外同胞対象の韓国語や韓国文化教育の必要性の有無 (23) 必要であればその理由 (24) 韓国語教育に関連して韓国政府が優先的に支援すべき分野は何か。(25) 在外同胞ネットワーク推進事業が在外同胞の社会発展に寄与すると思うか。(26) 在外同胞ネットワーク化を成功に導くためにはどんな政策を推進すべきか。(27) 韓国のイメージアップのためにどんな活動をしているか。(28) 現在、在日韓国人に対する日本社会の待遇についてどう思うか。(29) 不十分であれば、改善すべき点は何か。(30) 韓国の国家ブランドをアップするために、在日同胞にできることは何か。(31) 調査対象者の性別 (32) 調査対象者の世代 (33) 調査対象者の出生国 (34) 調査対象者の渡日時期 (35) 調査対象者の年齢 (36) 調査対象者の学歴 (37) 調査対象者の職業 (38) 調査対象者の年間収入 (39) 調査対象者の結婚関係 (40) 調査対象者の韓国親戚関係 (41) 親戚との連絡如何 (42) 韓国語能力 (43) 韓国語教育の経験有無 (44) 韓国語教育を受けた期間 (45) 韓国訪問有無 (46) 韓国訪問回数

5. 研究結果

5-1. 在日韓国人の生活実態面

(1) 日常生活および態度

a. 持っている名前

本名(韓国式の名前)のみ持っている場合が25.4%、本名と通名(日本式の名前)の両方を持っている場合が74.6%であった。一世の場合、本名のみ持っている場合が48.1%、本名と通名の両方を持っている場合が51.9%であったが、二世と三世は本名と通名の両方を持っているという答えが80%以上あった。在日韓国人連合会会員の場合、本名のみ持っているという回答が75%であった。

b. 主に使う名前

通名を主に使い、必要な場合に本名を使うというのが59.7%で最も多かった。本名を主に使い、必要な場合に通名を使うというのは24.5%、本名のみ使うという

のか8.7%、通名のみ使うというのが7.1%の順である。在日韓国人連合会会員の場合、本名を主に使い、必要な場合に通名を使うという回答が72.7%であった。

c. 主に通名を使う理由

日本に住んでいるため、日本人との付き合いにおいて本名より通名の方が相手に親近感を与えるために、というのが41.4%で最も多かった。次に、特別な理由はないというのが38.2%、本名を使う場合は社会生活上に外国人として不利益を受ける恐れがあるからというのが10.8%であった。

d. 本名を使っても社会生活に支障のない場合は本名のみを使うというのが68.7%で、それでも通名を使うというのは31.3%であった。

e. 日本社会への貢献

居住する地域において、ボランティアなど日本社会のために普通に参加しているという答えが69.7%、積極的に参加しているというのが17.2%、参加していないというのが13.1%であった。

(2) 日本社会で体験したこと

a. 外国国籍という理由から不利益を受けた経験の有無

これまで会社、地方自治団体や学校などに就職を希望した場合、外国国籍という理由から不利益を経験したことがあるという答えが19.5%、なかったが80.5%であった。一世に比較した場合、二世以上においては願書提出や採用を拒否された経験が多少多かった。

b. 採用後、外国人という理由から部署配置や昇進において不平等に扱われた経験があるという答えは6.3%、なかったというのが93.7%であった。

c. 国籍問題で傷付いたことがあるか55.6%、なかったか44.4%であった。傷付いた具体的な例としては、からかいや蔑視が56.6%、経済的法的社会的な差別が33.5%などであった。

5-2. 在日韓国人の意識面

(1) 日本の外国人行政に関する意見

a. 永住外国人への参政権の付与問題

日本に永住している外国人に地方議会や地方自治体長の選挙権および被選挙権を付与することに関しては、選挙権と被選挙権を同時に付与すべきであるという回答が41.4%、選挙権を与えた後に被選挙権を付与すべきであるというのが28.5%、選挙権のみ付与すべきであるというのが16.4%となっていて、選挙権を付与すべきであるという意見が86.3%もあった。

b. 帰化意思の有無

日本に帰化する意向がある 21.7%、ない 78.3%であった。この数値は、2000年の民団中央本部調査における、帰化する意向はない 43.6%に比べると大幅に増えたことになる。

帰化意思のない理由としては、韓国人であるからが 42.6%、必要性を感じないが 36.4%あった。帰化意思のある場合は、日本に永住するつもりで外国国籍では社会活動上に制限があるからだという理由であった。

c. 子女の帰化問題については、本人の意思にまかせるというのが 72.7%、賛成14.5%、反対 12.8%であった。

d. 日本に帰化した同胞については、どちらでもない 70%、良いと思う 16%、良いとは思わない 7.2%、とても良いと思う 6.2%、とても良くないと思う 0.6%であった。どちらでもないというのを除いてみると、帰化した同胞に好意的な場合が多かったのが分かる。

e. 日本に対する親近感の有無

ある程度親密に感じる 44.1%、とても親密に感じる 39.1%、どちらとも言えない 12.8%、あまり親密に感じない 3.4%、全く親密に感じない 0.6%の順であり、日本に対して親密に感じるというのが 83.2%であった。

f. 日本社会における現在の在日韓国人に対する待遇についての評価

どちらとも言えない 32%、不十分であると思う 31.2%、それなりに十分である 19.9%、とても不十分である 12.5%、とても十分である 2.1%であった。不十

分である 43.7%、十分である 22%となる。

g. 改善すべきところ

不十分であると答えた人が挙げた改善すべき事項としては、参政権 40.7%、就職 19.3%、意識改善 14.7%、法的地位 14%、社会的地位 12.7%、福祉 10.7%、教育 7.3%、歴史教育 6.7%、行政 3.3%、人権 2.7%の順であった。

h. 韓国に対する親近感

とても親密に感じる 49.9%、ある程度親密に感じる 39.2%、どちらとも言えない 7.6%、あまり親密に感じない 2.6%、全く親密に感じない 0.6%の順であった。在日韓国人一世の場合、韓国をとても親密に感じるというのが 68.5%で、二世・三世になればなるほど、とても親密に感じるという回答は少なくなる傾向が見られる。

(2) 20年後の在日韓国人社会に対する展望

これから20年後の在日韓国人社会はどうなると思うか、という質問に対し、実体がほとんどなくなる 42.1%、現在と変わらない 26%、よく分からない 21.7%、現在より結束の強い社会になる 10.2%の順であった。

5-3. 在外同胞政策に関する意見

(1) 韓国政府が在日同胞のために緊急にすべきこと

韓国政府が日本居住の在外同胞のために緊急に支援すべき分野としては、韓国文化・韓国語教育・韓民族文化行事など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維持のための支援策を挙げた人が 66.7%、韓国政府支援の在日同胞対象投資支援センターの設立 7.8%、居住国定着に役立つネットワーク情報の提供 6.7%、居住国で発生する事件事故に対する在外国民の保護活動 4.5%、無料医療活動 1.9%、居住国政府と在外同胞関連協力の強化 1.7%、職業訓練事業の拡大 1.5%、韓国企業による合資投資の奨励 1.1%、訪問就業制の拡大 0.9%の順であった。

(2) 在外同胞を対象とした韓国語や韓国文化の教育必要性の有無

必要である 40.7%、非常に必要である 45.5%、普通である 11.9%、必要ない 1.2%、全く必要ない 0.6%になっていて、必要であるという意見が 86.2%あった。

(3) 必要であればその理由

同じ民族あるいは自分の根本を知るべきであるからが 78.2%、今後韓国語や韓国文化を知った方が社会生活に有利であるからが 15%、その他 6.8%の順であった。

(4) 現地での韓国語教育と関連して、韓国政府が優先的に支援すべきものは何か。

財政の支援 51.5%、韓国語研修プログラムに対する支援 19.8%、韓国語教師への支援 9.6%、語学の実習設備の支援 3.2%、教材の支援 2.8%などであった。

(5) 在外同胞ネットワーク推進事業の在外同胞社会発展への寄与如何

ある程度発展が期待される 52%、非常に期待される 19%、普通である 18.2%、あまり期待しない 0.4%であって、発展を期待している人が多かった。

(6) 在外同胞ネットワーク化のための政策

グローバルな在外同胞のネットワーク化が成功するためには、交流形態の多角化 19.7%、財政支援および意識改善がそれぞれ 6.3%、団体支援および教育強化がそれぞれ 4.7%、広報 3.9%、文化交流 3.1%の順で、特に交流形態の多角化のためには専門分野別、年齢別、国家別に多様な交流が必要であるという意見が提示された。

(7) 韓国のイメージアップのための活動

個人的に回りの現地人に韓国語や韓国文化について知らせている 33.3%、自分の属した団体や機関において時々韓国のことを知らせるなどの広報活動をしている 32.4%、韓国の広報をしようとは思うが資料・情報・予算の不足で実施

してはいない 15%、韓国の広報よりは日本への関心がより高い 8.1%、その他 11.2%であった。

(8) 韓国ブランドアップのための活動

韓国の国家ブランドアップのために日本地域の在外同胞にできることとして、アイデンティティーの確立12%、広報11.4%、文化の伝達 10.8%、秩序を守る 8.9%、政府役割の促進および自己開発がそれぞれ5.7%、調和的な共同体生活 5.1%、民団強化および民間交流がそれぞれ4.4%、韓国製品の購買および歴史理解がそれぞれ3.2%、韓国語の使用と教育 2.5%、意識改善 1.9%の順であった。

6. 要約と結論

6-1. 在日韓国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認識

(1) 名前(本名と通名)関連

4人中3人は本名(韓国名前)と通名(日本式の名前)を持っていて、4人中1人が本名のみを持っていた。日常生活において通名を主に使い、必要な場合に本名を使うというのが10人中6人であった。通名を主に使う理由としては、日本に住んでいるため、日本人との付き合いにおいて本名より通名の方が相手に親近感を与えるので、というのが41.4%で、特別な理由はないというのが38.2%であった。しかし、本名を使っても社会生活に何の支障も生じないのであれば本名のみを使うという人が68.7%に達した。

(2) 不平等の認識および経験

民間企業、公共機関などに就職の際、差別を受けた経験がある人は 19.5%あった。だが、二世、三世、四世になればなるほど、その数値は減っている。就職後に勤務部署の配置や昇進などにおいての不平等経験は6.3%程度であり、若い世代ほど少ないことが分かった。

(3) 国籍と帰化

過半数以上の55.6%の人が国籍問題で傷つけられたことがあると答えた。日本に帰化する意向については、ほとんどの人(78.3%)がないという回答であった。これを世代別にみると、在日韓国人一世の場合は12.7%のみ帰化意思があると答えた反面、二世(19.2%)、三世(29.3%)、四世(38.5%)というふうに、世代が下るにつれてそのパーセンテージも増加する。

6-2. 日本に対する認識および態度

(1) 日本に対する親密感

5人中4人が日本に対して親密に感じ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世代別には、一世よりは二世、三世など世代が下るほど親密感が高まる傾向であった。

(2) 参政権の付与

地方参政権(選挙権)付与を希望する人が86.3%にも達した。

地域住民として地域行政に関する意思決定に参加できる方法である投票権は早速与えられるべきであると思われる。

(3) 日本社会への参加程度

回答者の87%が自分の居住する地域のためにボランティア活動をしていると答えた。

(4) 在日韓国人の待遇に対する評価

現在、日本社会の在日韓国人に対する処遇は十分であると答えた人が22%で、不十分であるが43.7%あった。不満足の方が約二倍あることになる。

6-3. 韓国に対する認識および態度

(1) 韓国への親近感

回答者の約90%が韓国に対して親近感を持っていると答えた。世代別では一

世が最も高い反面、若い世代になるほど親近感の度合いは低くなることが分かった。

(2) 韓国語や韓国文化教育の必要性

在外同胞を対象とした韓国語教育や韓国文化教育について、回答者の86.2%が必要性を感じていた。

(3) 韓国の国家イメージアップのための活動

韓国のイメージアップのために、個人的に回りの現地人に韓国語や韓国文化について知らせている 33.3%、自分の属した団体や機関において時々韓国のことを知らせるなどの広報活動をしている32.4%などであった。なお、在外同胞に具体的にできることとしては、アイデンティティーの確立12%、広報11.4%、文化の伝達 10.8%の順であった。

(4) 韓国語教育と関連して、韓国政府が優先的に支援すべきもの

財政の支援、韓国語研修プログラムへの支援、韓国語教師への支援などが挙げられた。

(5) 在外同胞ネットワーク事業についての展望

在外同胞社会の発展において、在外同胞ネットワーク事業に期待すると答えた人が71%あった。

(6) 韓国政府が在日同胞のために緊急にすべきこと

韓国政府が在日韓国人のために緊急に支援すべきこととしては、韓国文化・韓国語教育・韓民族文化行事など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維持のための支援策を挙げた人が最も多く、次に韓国政府支援の在日同胞対象投資支援センターの設立、居住国定着に役立つネットワーク情報の提供などが続いた。

7. 提言

7-1. 今回の意識調査においては、とりわけ標本の選定に困難があった。今後、在日韓国人の全体の母集団を代表できる標本の抽出が必要であり、さらに民団系に限らない総連系同胞を含む調査が必要であると思われる。

7-2. 今回のアンケート調査を通して明らかになった、在日韓国人の日本社会や韓国政府に対する要望が受け入れられることを願う。